

#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3
----------	------

제출연월일 : 2017. 0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보조대상 사업 추가(안 제4조)
- 나. 상위법에 근거한 보조금 교부제한(안 제29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8

##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17년 5월 15일 ~ 6월 5일(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관련협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0. 관련부서 : 경기도 예산담당관

#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29조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
	팀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조남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 유 진 (790-5680)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보조대상 사업)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lt;신 설&gt;</u></p> <p><u>3. (생략)</u></p>	<p>제4조(보조대상 사업)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u></p> <p><u>4. (현행 제3호와 같음)</u></p>
<p>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u>제4호까지</u>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u>제한하여야 한다</u>.</p>	<p>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 <u>제3호까지</u>----- ----- ----- <u>제한할 수 있다</u>.</p>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